

“호남권 지하단층 조사, 해남·영광·광양 우선해야”

기상청 내년부터 전라·충청·제주권 대상
결과 알림 방식도 과학적 소통체계 필요
신정훈 “일회성 그치지 않게 법 등 정비”



신정훈

정부의 호남권 지하단층 조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연속 지진이 발생한 해남과 원전이 들어선 영광,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1일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향후 전라권 조사에서는 최근 연속 지진이 발생한 해남을 비롯해 지진활동과

주요 산업시설·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광양 지역과 영광원전 지역의 지하단층과 활성단층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18~2021년 영남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단계 지하단층 조사를 벌여 내륙 8개, 해역 2개 등 모두 10개의 지하단층을 확인했다. 내륙에서는 연천·중부·연천 남단·성북구·포항지진·밀양단층·속리산·안동지역·거창지역이, 해역에서는 영덕해역과 경주·포항해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지하단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라권 조사 대상 가운데 해남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지하에서 실제로 어떤 단층이 움직였는지, 반복적인 지진활동이 특정 단층과 연관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하단층 조사는 지표에 드러나지 않아 기존 지진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층을 실제 지진활동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지진이 반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

적이다.

해남의 경우 본조사에 앞서 임시 지진관측망을 확대하고 기존 지진 발생 자료와 지질·지구물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실상 예비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영광은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시설물 자체의 내진성능뿐 아니라 주변 및 하부 지질구조와 단층 분포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광양 역시 우선 조사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론된다. 광양만권에는 제철·화학·항만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생산 차질과 물류 중단, 유해물질 누출 등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단계 조사 결과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고 연구보고서 형태로 공개됐지만, 확인된 지하단층의 위치와 의미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 단층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도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하단층 조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조사 결과를 지진방재정책에 연계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그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78주년 국군의 날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민께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

한병도 “국민에 총부리 겨논 독재자 비호”

더불어민주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논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

해서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가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지난 8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에서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

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논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모태펀드 청산 자펀드 106개 ‘손실’ 투자기업 절반 이상 원금 못 건져

권향엽 “지역성장펀드 비수도권 중기 활력”

정부 출자 모태펀드 가운데 청산을 완료한 자펀드 352개를 분석한 결과, 106개 자펀드가 투자금보다 회수금액이 적은 ‘손실’ 상태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산채 등 13개 중앙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총 12조9천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연금 등 민간 자금이 추가 출자되면서 1천478개 자펀드가 총 50조1천542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이 가운데 38조2천989억원이 1만1천856개 기업에 투자됐다.

현재까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52개로, 이들 자펀드는 3천541개 사에 총 10조5천476억원을 투자했다. 회수금액은 17조681억원으로 전체 회수배수는 1.62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산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을 8.0%로 설명했다.

하지만 개별 투자기업별로 보면 손실 사례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3천541개 사 가운데 51.3%인 1천817개 사의 회수배수가 1.0배 미만으로 나타났다. 투자원금보다 회수금액이 적어 원금조차 모두 회수하

지 못한 것이다.

특히 회수금액이 0원인 ‘전액 손실’ 기업은 168개사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회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기업은 442개사(12.5%), 100만원 이하인 기업은 490개사(13.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체 투자기업 3천541개사 가운데 2천687개사(75.9%)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다. 투자금액 역시 전체 10조5천476억원 가운데 7조4천302억원(70.4%)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지역별 수익률에서는 전남광주가 0.99배로 가장 낮았다. 다만 지역별 수익률은 투자기업 수와 투자금액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 의원은 “모태펀드의 목적이 단순한 투자 수익 창출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있는 만큼 손실 자체를 잘못된 투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액 손실 등 특이사례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1천250억원, 대경권 1천250억원, 전북 1천억원, 대전 500억원, 울산 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가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CMYK